

사료값 폭등·폐기물시설 설치...양돈농가 '錢錢공공'

(전전)

전염병 예방 시행규칙 개정에 연말까지 설치 의무...전남 설치율 6% 불과
농가 77%가 50대 이상 고령에 시설 확충 꺼려...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지역 돼지 농장주들이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료값이 폭등해 돼지를 팔고 나서도 손에 쥐는 게 얼마 없는데,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을 들여 폐기물 관리 시설을 들여놓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체 양돈 농가의 77%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된 점도 시설 확충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히는 만큼 전남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폐사 가축 등 농장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전남 양돈 농가는 모두 498농가에 이르지만, 현재 30농가(6%)만 법적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498농가가 키우는 돼지만 136만 6000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돈농장의 방역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

하던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 농장으로 확대했다.

양돈 농가들은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사체 등 폐기물을 수거한 뒤 위탁 처리가 가능한 냉장보관시설(개당 1000만원) ▲폐사체 처리기(개당 3000만원) ▲폐사체 수거함(개당 80만원)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냉장보관시설, 폐사체 수거함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사체 처리기가 지난 5월에야 법적인 관리시설로 인정받아 보니 아직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방역 인프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

면서 지난 6월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농장에서 외부인 출입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해 방역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높은 설치 비용에도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 방안이 전혀 없다 보니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하는데 머뭇거리는 농장주들이 적지 않다.

전남도의회 이규현(민주·담양 2) 의원은 "돼지 농가들은 고령화돼, 물려줄 후계 농업인도 없는 상황에서 사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도 좋지 않은 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게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3차재 위반할 경우 최고 8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는 게 처리리 닦

다는 푸념도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전남도의회가 이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 3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채택한 것도 이같은 축산 농가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할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과 생산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양돈 산업 종합진흥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핵심 골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돼지 농가의 의견을 수렴, 폐사체 처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기간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서 '국제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 개막



글로벌 휴먼 기업가정신 광주선언
Gwangju Declaration of Global Human Entrepreneurship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NGO시민센터 시민마루에서 '광주시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등 시 관계자 20여명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현안 토론회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의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광주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3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시민사회 활성화, 장애인 이동권, 보육노동, 풍양저수지, 영산강·황룡강·Y벨트, 여성과 안전도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정책 제안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 같은 주제 토론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현장 목소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인 '이야기 마당'이 추가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마을자치 활성화, 5·18관련자 8차 보상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접수, 일자리 다양성 확보, 여성일자리, 불법건축자재, 도시홍보공간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기수식 참여자21 사무처장은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동의하지만 많이 들어오는 게 농사는 아니다"면서 "소비 여력, 동종업종 폐업과 고용 악화 우려, 교통 등 시가 시민 편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몇 개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잘 되면 좋겠다"면서 "광천동 일대 교통은 최소 2030년까지 상황을 예측하는 통합 교통영향 평가를 지시했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승용차 진입 금지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다양한 제안으로 생산적인 토론이 됐다"며 "시민이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 토론회였다"며 "앞으로도 광주 발전과 성과를 만드는 일에 목적을 두고,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격려로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시민사회단체, 현안 해법 찾기

강기정 시장, 두 번째 토론회...복합쇼핑몰·노동·안전 등 제언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NGO시민센터 시민마루에서 '광주시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실·국장 등 시 관계자 20여명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현안 토론회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의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광주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3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시민사회 활성화, 장애인 이동권, 보육노동, 풍양저수지, 영산강·황룡강·Y벨트, 여성과 안전도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정책 제안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 같은 주제 토론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현장 목소리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인 '이야기 마당'이 추가됐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마을자치 활성화, 5·18관련자 8차 보상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접수, 일자리 다양성 확보, 여성일자리, 불법건축자재, 도시홍보공간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남도장터, 추경안 등 9개 안전 의결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13일 도청 정철실에서 '2023년 제2회 임시 이사회'를 열어 농어가 소득 향상 및 판로 확대, 재단의 독립적 역량 확보를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배현진 남도미향 대표, 이달석 농업문화원장, 위지연 청산비다 대표 등 유동 및 소평몰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 10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제)남도장터 조직개편안 ▲남도장터

운영규정 제정 ▲직제, 인사, 보수 등 11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예산 남도장터 온·오프라인 판매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억3800만원을 증액했다.

조직 개편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조직을 총괄하는 본부장 직제 신설 내용을 담았다. 또 팀별 기능과 역할 분담을 시스템화해 업무가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일부 팀을 신설하고 통합 조정해 조직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4년만에 국내 개최...DJ센터서 경쟁력 강화 등 논의

김보곤 (주)DK 회장 등 광주기업인 100여명 '광주선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논의하는 '2023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 세계대회' 개최식이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 대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2009년 서울에 이어 14년 만이다.

개회식에서 원슬로우 사젠트 ICSB 의장은 "광주는 대학, 정부 기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아이디어 구상에서 성장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인간성과 평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구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업가 정신은 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필요하다. 광주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회가 광주와 광주를 찾는 모든 기업이 더 큰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곤 회장 등 기업인들은 선언문에서 기업가 정신을 통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며, 기업적 혁신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는 또 이날 행사와 연계해 KT, 롯데쇼핑과 함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학술 포럼,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시회, 스타트업 만남 행사, 수출상담회 등 프로그램이 14일까지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겨울 안전 전국 1위

전남소방본부가 '2022-2023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소방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 특성 및 지역적 재난 취약점을 분석, 다양한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난안전 데이터 매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방식의 새로운 소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소방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한 점도 반영됐다.

60대 이상으로 구성된 불타는 청춘119소년단 캠프클럽 운영과 전국 최초 고향사랑 기부제 담배 품에 화재안전시설을 포함하는 등 소방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소방이 18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선정됐고 강진소방서가 전국 230개 소방서 중 1위 소방서로 뽑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